

# “절반이라도 돌아와라”... 의대 집단제적 앞두고 복귀 독려

교육부, 내년 의대증원 동결 조건  
전원 복귀서 절반가량으로 낮춰  
대학 40곳, 이달 말 마감기한 지정  
의대생에 서한 보내며 복귀 촉구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의대생들의 등록은 여전히 저조해, 학칙에 따른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26 의대 증원 동결'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 전원 복귀'를 내걸었지만, 정부와 대학은 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며 학교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에 나선 의대생 복귀 시한이 속속 도래하면서 이달 말까지 대부분 의대가 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하지만 의대생 등록은 저조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복귀 등록을



서울대 의대 학장단이 동맹휴학중인 학생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붙여져 있다. /뉴시스

마감한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생들은 50%를 상회하는 인원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대도 절반 가량 의대생이 복귀를 선택했다.

교육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조건으로 당초 '의대생 전원 복귀'로 내놨지만, 최근 이를 수업 정상화 수준인 '절반가량'으로 낮춰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이 한명 빠짐 없이 전부 돌아

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대부분은 이달 말로 의대생 복귀 마감시한을 지정한 상태다.

복귀 기한을 28로 정한 전북대의 양 오봉 총장은 25일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교 복귀를 촉구했다. 양 총장은 "휴학·복학, 수강신청, 유급·제적 등 학사 업무는 학칙과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늘이라도 당장 학교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 총장은 의대 보유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공동회장이자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의대생 복귀 문제엔 '원칙 대응'하겠다는 의대 전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귀 시한이 이달 27일 오후 5시인 서울대 의대도 학장단이 25일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27일까지 복귀하는 학생은 교육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업받게 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과 학사관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학생 복귀를 독려했다.

한편, 의대생들이 절반가량 돌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동결되더라도, 의대생 대규모 제적 사태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와 의대들이 의대생 집단휴학 시 제적 조치를 예고하며 '원칙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1학기 등록 절차를 끝낸 연세대는 미등록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고, 고려대도 문자와 이메일로 제적 예정을 통지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86% ‘50대 이상’”

남성·1인가구 비율 가장 많아  
채무 발생 원인 '생활비 부족'

작년 서울지역 개인파산 신청자 1302명(건) 중 86%가 50대 이상이었으며, 1인가구가 68.4%에 달했다. 주요 채무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74%였는데 변제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한 경우가 90.2%로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2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728건 중 15%에 달하는 1314건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접수됐다.

올해 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 86%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0대 이상 연령대에선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 연령층은 5.2%로 전년 4.4%보다

소폭 늘었다.

파산신청자 중 남성은 61.8% (805명), 여성은 38.2% (497명)로 남성 비율이 매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 81.7%에서 이듬해 83.5%로 오르고, 올해는 83.9%를 기록하면서 최근 3년간 80% 이상 비율을 보였다.

가구 유형으로 분석하면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았으며 매년 약 5%씩 상승하는 추세였다. ▲2인 가구(18.8%) ▲3인 가구(7.6%)가 뒤를 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74.5%)이 가장 많았고 '사업 경영과 탄' (27.9%)이 다음이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도 15.5%를 차지해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함을 반증했다.

또한 파산신청자 중 직업이 없는 경우가 85.6% (1115명)였고 정기 고용 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7.1% (93명), 0.6% (8명)로 부채 해결 이후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가 중요함을 보여줬다. 신청인 중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62.7%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신청인 82.0% (1068명)는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69.2%가 임대보증금 '600만원 미만'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200만원 미만 보유자는 90%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60.1%가 1억원 미만이었으며, 평균 구간인 '5000만 원 이상~1억원 미만'은 25.2%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2013년 7월 개소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3478명의 악성부채 3조6118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빚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교육과 함께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올해 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준공 예정

정근식 교육감, 현장점검 실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6일 교육청 신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신청사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 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사의 공정률은 지난 1일 기준 40%이다.

현재 사용 중인 종로구 청사는 1981년 지어져 44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되고, 직무 공간과 회의실 및 민원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 그럼에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해 증·개축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청사 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2022년 구(舊) 수도여고 부지에 신청사를 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내부조감도./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개방과 소통의 광장'이라는 설계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3만9937㎡ 규모로 건설된다.

신청사는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친환경 녹색건축물이 특징이다. 1~3층에는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북카페, 커뮤니티 계단, 컨퍼런스룸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4~6층에는 ICT 기술 활용에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 클라우드 프린팅, 자율좌석제를 적용한 스마트 직무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 '고용안정금'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신규 운수종사자·장기근속자에  
각각 월 20만원·5만원 지급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신규 유입을 늘리고 이탈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 5월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2019년~2024년 법인택시기사 인원 및 일평균 운행대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법인택시기사	30,527명	24,507명	20,888명	20,599명	20,430명	20,358명
일평균 운행대수	17,088대	14,467대	12,664대	11,981대	11,996대	12,016대

/서울시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확인 후 4월에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약 2만명이다. 이는 2019년 대비 1만 명이 감소한 상태로 신규 유입도 적어 택시업계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연년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 지급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은 월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 고양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혁신행정 등으로 2년 연속 선정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2024년 실적 기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시민 중심의 혁신행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고양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체감도 등 5개 항목, 총 17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고양시는 기관장의 관심도, 지원제도 활용, 우수공무원 선별, 교육·홍보 실적 등 대부분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

안 해결, 우수사례 발굴과 인센티브 제공, 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 등 체계적인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다.

고양시가 이번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꼽힌 배경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사례 발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마을회관 건립비용을 지원한 정책이 손꼽힌다.

고양시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교육 확대, 포상 강화, 공무원 보호제도 도입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집중해왔다. 이 같은 노력은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 등 두드러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